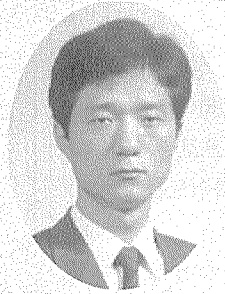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김 대 희  
〈 정보통신부 정보화지원과장 〉

최근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간단계 조직의 축소, 택배업 등 물류업의 성장 등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경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기본적으로 비대면거래이며 최근에는 거래의 상대방을 알 수 없는 비대면거래의 특성을 악용한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1. 전자상거래 법·제도 정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제도는 99년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된 상태이며 2000년부터는 세부분야별로 법·제도 정

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지침」,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 민간부분의 「암호이용제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확산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자상거래 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업환경 개선과 지원시책의 제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 □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확보

전자상거래 당사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전자상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서명 공인인증제도를 2000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0.2.10일 한국증권전산(주), 한국정보인증(주)을 전자서명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전자상거래시 취득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고, 2000년중에 민간의 암호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거래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할 계획이며 해킹 등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신뢰성 기준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한다.

### □ 소비자보호 강화

비대면거래인 전자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환불제도 등을 강화하고,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결제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화할 수 있도록 2000년 1/4분기중에 은행권에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금년중에 제정하고, 향후 각국의 동향 및 국제규범 정비추세 등을 감안하여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국제규범 제정 동향을 계속 검토·분석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 분쟁 발생시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결정을 위한 섭외사법, 민사소송법 등의 정비도 추진하게 된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자거래기본법에 규정된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를 2000년 1/4분기내에 구성하여 전자상거래 특성에 맞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계획이다.

### □ 전자상거래 사업환경 개선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년중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자상거래 과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감안

하여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대면거래를 전제로 시행중인 각종 규제중 사이버몰의 설립, 운영, 대금결제 등 전자상거래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여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 2.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정부에서는 최근까지 2010년까지 구축예정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왔으며,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2~3만원대의 정액요금으로 제공하고, 선택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고, ADSL·CATV망 등을 통한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6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콘텐츠의 대용량화, 인터넷 이용인구의 지속적인 급성장 등을 감안할 때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완료시점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의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핵심분야중 하나인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에서는 97년부터 CALS/EC, 동시공학, ERP, 정보보호 등 전자상거래 관련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표준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 쇼핑몰, 물류망 등 전자상거래의 구성 요소간 상호 연계를 위해 필요한 표준의 개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 벤처기업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의 창업 열기로 인해 전자상거래 전문가의 부족 현상이 한층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과 민간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 완성

정부에서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반으로 당초 2010년까지 구축 완료예정이던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05년까지 앞당겨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까지 전국 144개 지역을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기간전송망을 구축하고, 동영상급(1.5~2Mbps)의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광케이블, CATV망, ADSL, WLL 등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유선 가입자망을 대폭 확충하여 금년까지는 200만 세대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인터넷 이용 속도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병목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터넷 국제회선 용량을 현재 1Gbps에서 2배 이상 대폭 확충하고 국내 인터넷 전송망 구조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부터 전자상거래의 주된 이용 계층인 주부들 100만명에 대해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가정에서 전자상거래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기업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SCM 요소기술, XML-EDI 기술,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자상거래 공용플랫폼, 전자지불, 공통기반에 해당하는 정보보호, 인증, 동시공학, 제품정보관리 기술 등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수요가 크고 개별 기업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핵심기술과 차세대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에 이전함으로써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기존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기술 수요에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0~2002년간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에 총 643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금년에는 17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하는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표준화를 체계적

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에 따라 전자문서, 정보기술, 통신기술, 요소기술 등으로 특화되어 있는 현행 표준화 추진체제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0년 하반기중 전자상거래 표준화 계획(Standards Map, 2001~2003)을 수립하고 관련부처, 민간 협조하에 체계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문 전자상거래사업, 공공부문 조달 EDI, 건설·국방 CALS 등 시급한 표준을 우선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표준화 사업에는 2000~2002년간 총 1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3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 □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인력 확보가 선결요건이며 이를 위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인적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2000년 상반기에 전자거래진흥원, 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인력 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수요 전망이 제시되면 2000년 하반기에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인력양성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인력 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2000년중 「2001년도 대학 학생정원조정 지침」에 반영하여 대학 등에 전자상거래 학과의 신·증설을 적극 유도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첨단 기자재 및 교수원의 확충을 지원하며,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0~2002년 3년간 정보화촉진기금 총 4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282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부문의 인력 양성 확대뿐만아니라 이외에도 실업자 교육훈련기관, 재직자 훈련기관을 통해 민간부문의 전자상거래 기초 기술인력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

체적으로는 2000년부터 정보통신교육원에 EC전문개발자과정 등 전자상거래 인력양성과정을 개설, 매년 4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00~2002년간 정보화촉진기금 등 총 54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검증된 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출제기준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전자상거래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를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 전자상거래 물류체계 기반조성

전자상거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물류의 효율화를 위해 국내 물류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물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부문 전자상거래 확산사업에 공동물류를 필수사업으로 추진하고 물류공동화 부지확보 지원,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등 산업별 공동물류체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업-소비자간 전자상거래 물류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사이버물 발전협의회(99.3)」를 통해 사이버물업체와 택배회사간 공동물류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고, 우체국 소포우편의 방문접수를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해 육상, 해운, 항공 등 물류망과 무역·통관·금융망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수출입 화물 정보, 선박 입출항 정보 등에 대한 D/B를 확충하여 원활한 물류흐름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문 물류업체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물류 업체의 정보화를 지원하여 인터넷 기반의 물류기능(e-Logistics)을 강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000~2002년간 총 250억원을 지원(유통합리화자금)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분야 新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수입의 존율이 매우 높은 물류자동화 설비, 물류정보화 시스템 등의 개발 지원에 매년 5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30개 업체 수준인 표준물류바코드 도입업체를

2002년까지 1,000개 업체 이상으로 확대하고 표준 파렛트 보급율을 40% 이상을 확대하는 등 물류효율화의 기반이 되는 물류표준화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보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용어해설



#### • ECN

ECN(Electronic Communication Network·전자증권거래 네트워크)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하는 전자적인 증권거래 시스템이다. 증권회사나 언론사들이 온라인상에서 설립하는 가상 증권거래소로서 기존 증권거래소와는 달리 실체가 없이 온라인상에서만 존재한다. 즉 투자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내는 매매 주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ECN 시스템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ECN은 신속한 거래, 낮은 수수료, 거래 당사자의 익명성 보장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불법·탈법 거래가 성행할 수 있다. 또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어 선의의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